

與,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 투표로 결정

이낙연 "후보 공천 통해 심판받는게 책임있는 도리" '공천 찬성' 기류 강해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사실상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년 재보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천 찬성' 기류가 강해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해 오래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

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보궐 선거를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서울·부산 재보선 공천 여부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말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돼 치러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당원 투표 결과도 '공천 찬성'이 압도

적으로 많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 여부에 대해 물은 뒤 공천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헌·당규의 경우 개정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개정하지 않는 대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나 재보선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왔으나, 당 지도부가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조기에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회의에서 한정애(왼쪽)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 논란 靑 국감 다음달 4일로 연기

여야 지도부 합의

29일 실시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원회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로 국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국감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한 데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 등을 내세웠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국감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청와대 국감이 안보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선 의미가 없다"며 "다음주에 서훈 실장의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이유를 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운영위 국감 장소에 나와 대기하다가 일정 연기 소식을 듣고 복귀했다. 노 실장은 "다음주 서훈 실장의 출석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2주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인가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의 출석도 조율되느냐'는 질문엔 "그런 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종호 민정수석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깊은 고민

민주, 원안 고수 정부 설득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돌입하는 모습이 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난항에 빠진 정부와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 원' 보다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보전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히 주택의 '중저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만큼 기존의 잣대만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라임·옵티머스' 특검론 일축

검찰이 조사해야...윤 지지율 상승엔 '의문의 1패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에 그런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병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을 지목할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

디오에서 "라임·옵티머스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이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처장을 뽑을 도구"라며 "그 비토권을 목적과 취지대로 쓰지 않고 출범을 방해·지연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오용·남용"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의문의 1패는 야당"이라며 "민주당 후보 두 분의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강기정 "시도 통합, 호남권 초광역 프로젝트로 가야"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빅딜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은 광역철도망과 같은 초광역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과 겨뤄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행정통합보다는 광역 경제권 플랜과 같은 시도의 경제권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도 "빅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합 신공항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행 KDN 빛가람출에서 개최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 전남북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격차지만 비수도권 내부, 즉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17개 지자체의 경쟁만으로는 너무 커진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17개 시도별 여타면제 사업만으로는 지방의 갈등을 풀어나가기에 부족하다"며 "광역권이 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대통령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초광역 사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안공항을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문제는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빅딜을 해야 한다"며 "통합 신공항의 관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바이든 당선에도 전작권 전환에 차질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가능성과 관련,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반도 테스크포스'(TF)는 2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울 국방부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이같은 상황을 재확인했다고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는 미군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안정화 및 안보 태세 차원에서 미국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했을 때 전작권전환(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유효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완전운용능력)에 필요한 조치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다 못 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 2개)	2,480	1,680	제주 퍼스픽	로얄(34)방3	4,890	3,480	
		디럭스형 무기명(방 2개)	3,110	1,8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